

# 여야 '패스트트랙 한달 승부' 돌입

12월 3일 본회의 부의  
민주, 군소정당과 공조 주력  
한국당, 반대 여론전 가속  
오늘 3+3 회동... 선거법 논의



바른미래당 김관영 전 원내대표(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개정안 처리 촉구 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가 12월 3일로 확정되면서 여야의 수 싸움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당초 검찰개혁 법안의 선(先) 처리를 추진했던 민주당은 전열을 다시 정비하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의 '패스트트랙 공조' 복원을 가속화 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정치권 일각의 의원정수 확대 논의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이며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한 총력전에 뛰어들었다.

민주당은 한국당 및 바른미래당과의 교섭단체 협상과 군소 야당과의 패스트트랙 공조 복원이라는 두 트랙 전략을 토대로 의결정족수(현 297명 중 149명) 확보 총력전에 들어간 상태다.

이를 위해 공수처 설치가 핵심인 검찰개혁 법안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해 유연한 협상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당이 공수처 설치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을 전면 반대하고 있어 교섭단체와의 협상은 쉽지 않다는 게 민주당의 현재 판단이다. 따라서 군소 야당과의 공조로 무게 추를 이동하고 있으나, 이 역시 '선거법

변수'를 해소해야 하는 상황이다.

'의원정수 300명 유지, 지역구 축소 및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의 처리를 낙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정의당, 평화당 등이 의원정수 확대 목소리를 점차 높이고 있고, 이들과 패스트트랙 공조를 복원하려는 민주당로서는 이 같은 요구를 마냥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단 민주당 지도부는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비판적 국민 여론을 감안, 정수 확대에 선을 그은 상태다. 내부적으로는 '정수

확대' 대신 지역구 축소(현 선거법 개정안에서는 253석을 225석으로 조정) 규모를 줄이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의원정수를 늘리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300석을 유지하면서 지역구 대 비례대표를 240대 60으로 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의원정수 확대' 문제를 연결고리로 민주당과 군소 야당간 패스트트랙 공조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문제에 국민적 비판 여론이 크다는 점을 활용해 민주당과

군소 야당 간의 선거법 협상 여지를 없애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또 공수처를 '전문(전문재인) 보위부'라고 부르면서 반대 여론전도 가속화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 늘리는 게 정치개혁과 무관 상관이 있느냐"면서 "민주당과 범여권 정당의 선거법 및 공수처법 야합 자체가 참으로 후안무치한 반개혁, 반민주적인 작태"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 교섭단체 3당은 31일 비공개 '3+3(각 원내대표 외 1인) 회동'을 하고 선거법 문제에 대한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여야 공수처·기소권 놓고 이견

3당, 부의전까지 정례 협의...내달 5일 다음 협상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30일 2차 실무협상을 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협상은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최대 쟁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마련한 조정안 내용을 토대로 1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조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함께 지정된 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권 의원의 기존 공수처 설치법안에 대검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백 의원의 안과 권 의원의 기존 안은 모두 현직에 있거나 퇴직한 고위공직자를 수사 대상으로 하고, 공수처가 자체 수사한 사건 중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갖도록 했다.

다만 백 의원 안은 공수처가 수사 후 기소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으나 권 의원 안은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심의·의결을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 차이점이다.

이날 권 의원이 제시한 조정안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배제하고 영장청구권만 부여한 것이 핵심이다. 수사 대상 범위의 범위는 부패 범죄로 제한했다.

민주당 송기현 의원은 "검사 본연의 업무가 기소인데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소를 견제하기 위해서 권 의원의 (기존) 안처럼 기소심의위를 둔

다는 것은 논의할 수 있지만, 기소권 자체가 없는 공수처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와 관련해선 "권 의원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대폭 줄이고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 쪽으로 가고 있는데 한국당 전체의 입장인지 확인이 잘 안 된다"며 "분리가 합당하긴 하지만 당장 자르듯이 하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조정안에 대해 "기소권을 가진 것이 검사인데 수사권을 가진 검사를 상정해서 만든 공수처 안은 헌법하고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며 "영장청구권을 가진 검사가 근무하는 공수처는 제2의 검찰청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기소권을 배제한 것이 특기할 만했다"며 "백혜련 의원의 안보다는 진일보했다"고 평가했다.

권 의원은 "우리당은 검찰개혁이 중요해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방안을 먼저 논의하고자 했다"며 "분리 문제는 3당 간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권은희 의원은 "검경수사권이 조정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이 있는 이상 경찰 수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를 보완하는 범위에서의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전했다.

여야 3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검찰개혁 법안을 12월 3일 부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정례적 협상을 통해 이견을 좁혀나가기로 했다.

다음 협상은 내달 5일 오후 3시에 이뤄진다. /연합뉴스

# 오신환 "檢 개혁 핵심은 수사·기소권 분리"

바른미래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공수처 반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30일 "검찰개혁의 요체는 그동안 아무런 의문도 없이 검찰에 부여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에 수사권까지 제한 없이 부여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까지 행사하게 하면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이 탄생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규정하고, 이 두 가지 의제를 아우르는 게 바로 수사·기소권 분리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을 제대로 해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는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공수처 설치법안은 절대로 통과돼선 안 된다"며 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한 입으로는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며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와 수사·기소 분리를 요구하면서, 다른 입으로는 수사·기소권을 동시에 갖는 새로운 괴물 조직을 창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공수처장을 물론 처장과 수사검사까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누가 봐도 정권 지속 어용수사처 창설"이라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법안과 함께 여야가 대립하는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해선 "현행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와 함께 동시에 본회의에 상정하자"고 제안했다. /임동욱 기자 tuim@

# 한국당 오늘 영입 인재 발표 '총선 모드'

이진숙 전 MBC 기자·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등

자유한국당이 외부 인재를 영입하고 기존 당협위원회에 대한 당무감사를 완료하면서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 준비에 시동을 걸었다.

황교안 대표는 30일 오전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31일) 영입 인재를 발표하면서 국민들께 당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말씀드릴 것"이라며 "정부가 나아갈 방향,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국민에게 필요하고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난제들 풀 수 있는 방향을 감안해 적합한 인재를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어 "조만간 당 총선거획단도 출범 시켜 총선 승리를 위한 준비를 차

근히 해나가겠다"며 총선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을 시사했다.

오는 31일 한국당이 발표할 영입 인재 명단에는 '공관 갑질' 논란을 일으켰다가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박찬주 전 육군대장, 이진숙 전 MBC 기자,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 '시장주의 경제학자'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가 포함될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김용하 순천향대 경제학과 교수, 백경훈 청년이여는미래 대표 등도 영입 물망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하 교수의 경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한국연구학회 회장 등을 거친 연구 전문가다. 아이돌그룹 엑소(EXO) 멤버 '수

호'의 아버지로도 알려졌다. 백경훈 대표는 지난 8월 24일 한국당이 주최한 '살리자 대한민국! 문(文)정권 규탄 광화문 집회' 연단에 올랐다가 YTN 변상욱 앵커가 '수팔'이라고 비판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들은 황교안 대표 취임 후 '1호 영입 인재'로,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새 피' 수혈로 볼 수 있다.

황 대표는 취임 후 당 인재영입위원회를 중심으로 분야별 인재 2천여명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뒤 실제 영입 대상을 추려왔다. 한국당은 이번 1차 발표 후 순차적으로 영입 대상을 공개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영입 인재와 관련해 부정적인 여론도 적지 않다. 박찬주 전 대장의 경우 공관 갑질 논란을 야기했던 당사자였다는 점에서 한국당이 굳이 '1호 영입'으로 내

세울 필요가 있었느냐는 말도 나온다. 영입인사 중 일부는 인지도가 떨어지는 전문가 그룹이라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이목을 끌기에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함께 한국당이 영입 인재를 발표하는 31일에는 당협위원장이 공적인 사고당 협을 제외한 전체 당협위원회, 당협위원장이 아닌 국회의원, 비례대표 등에 대한 당무감사도 마무리된다. 당 안팎에서는 이번 당무감사 결과에 적지 않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총선이 5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만큼, 이번 당무감사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경우 경쟁력을 상실한 '물갈이 대상'으로 낙인찍힐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서다.

이번 당무감사는 '당협관리', '당원모집' 등과 관련한 성과를 계량화한 점수로 나타내며 기존 방식에서 벗어났다. 대신 1등부터 꼴찌까지 '줄 세우기'를 하기보다 지역 여론 등을 심층 분석한 서울형 평가를 내세운 것이 특징이다. /연합뉴스

## 6.25

# 한국전쟁

잊지않겠습니다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 전남연합유족회 제5회 | 장성유족회 제10회

# 합동추모제

일시 | 2019년 11월 7일(목) 12시(중식) 13:30~16:00

장소 | 장성군 군민회관

\* 미신고자 신고 ▶ 각 시군 유족회